‘희망 2009’ 이것만은 이뤄내자 ③ 문화수도 조성사업

역량 결집 ‘도청 별관’ 해법 찾아야

추진단-공대위 “철거·원형보존” 되풀이

시민단체·기관·국회의원 등 지혜 모을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별관 해체 논란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전당 건립공사가 1개월째 중단되는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공사차질이 계속될 경우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 공사 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별관 해체를 주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과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도청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간 갈등을 조정해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광주시,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24일 공대위가 옛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도청별관 철거논란이 불거졌지만 6개월째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 문화전당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2011년 문을 열 예정이었던 아시아 민주평화 교류원의 준공이 무산되는 등 사업에 연쇄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공기차질로 인해 지난해 전당건립을 포함한 문화수도 조성예산 5천56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4천961억원(89%)에 그쳤다.

그러나 추진단과 공대위가 별관 철거, 원형보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해를 넘겨서도 별관해체 논란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진단은 별관 해체 후 상징물 건립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대위는 여전히 ‘원형보존, 전당 설계 변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진단은 “설계안을 변경할 경우 기존 설계안에 반영된 5·18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도청 부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공사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며 별관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대위측은 “문화전당 설계안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별관을 보존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별관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이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추진단과 공대위가 별관철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지난해말 실무협상라인을 가동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관 철거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추진단과 공대위가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청 별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과 단체가 나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문화연대 김지원 사무국장은 “추진단과 공대위가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대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다”며 “별관철거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진단과 공대위, 양 당사자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2일 서울서 한·일 정상회담

아소 日 총리 11일 방한…국제 공조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사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7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소 총리가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면서 “11일 저녁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12일 오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새 정부들어 6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협력, 금융위기 협력 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취임한 아소 총리가 개별 국가를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재계 인사들도 대거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총리가 방한할 때 일본 재계 인사들을 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자지구 공격 중단하라”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7일(한국시간) 파키스탄 국제 이슬람대학 학생들이 이슬라마바드에서 공격 중단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투표 청구 가능 주민수 6만 209명

광주시 청구권 총수 등 공표

광주시는 7일 200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02만 3천545명,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6만 209명으로 확정해 공표했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104만2천925명이며 연서(連署) 주민 수는 1만2천270명으로 각각 확정됐다.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주민수 6만 209명은 20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이를 제외한 내국인 102만 3천294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251명을 포함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02만 3천545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 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역주민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내국인 104만2천925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獨 ‘5위 부자’ 메클레, 열차에 투신 자살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유 기업이 자금난에 빠졌던 독일 5위, 세계 94위의 거부(巨富) 아돌프 메클레(74)가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독일 남서부 울름 검찰은 6일 성명을 통해 메클레가 전날밤 인근 블라우보이렌의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타살의 징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전날 메클레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를 냈던 가족들도 성명을 통해 그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아돌프 메클레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다”면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지난 수주간의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회사의 위기,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절망감이 열정적인 가족기업가를 궁지로 몰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메클레가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포브스의 집계를 기준으로 92억 달러(약 13조2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던 메클레는 지난해 폴크스바겐 주식의 옵션 매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의 채무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연방정부, 주정부, 은행 등에 구제를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오바마, 적대국 대화 첫 상대는 차베스”

블룸버그 “국제 유가 하락이 오바마에 기회 제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적대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의지를 줄곧 천명해왔다.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우방과 적대국으로 철저히 나눠 적대국과 대결적 자세를 고수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외교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오바마 당선인은 여러 적대국 중 어떤 국가와 처음 대화의 물꼬를 틀까.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베네수엘라가 첫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 간에 상호 관심사가 많을뿐더러 국제 유가 하락이 오바마 당선인에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베스가 미국을 비판하는 지도자 중의 한 명이지만 미국에 상대적으로 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이란과 쿠바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가 더 쉬울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를 지낸 베르나르도 알바레스는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바마 당선인이 부시 행정부의 이분법적인 적군과 아군 구별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 제의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의 일부 측근도 개인적으로 오바마에게 마약단속과 에너지, 빈곤퇴치 같은 상호 관심사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차베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관계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베스가 석유와 재정 지원을 통해 우방으로 만들어놓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권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 폭락은 차베스 대통령의 도전적인 자세를 많이 누그러뜨렸다.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산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여름 배럴당 126.46달러까지 치솟은 최고가의 4분1 수준이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생각한 유가의 절반이다.

이에 따라 차베스는 국내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한편 외국에 대한 원조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연합뉴스